

# 호남 인사 과감히 발탁 민심 창구 만들어야

## ■ MB 국정쇄신 해법과 광주·전남은

### ‘영산강 살리기’ 주변사업과 연계 지역발전 유도

### ‘세종시 블랙홀’ 사라지면 혁신도시 탄력 받을 듯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례연설을 통해 밝힌 국정쇄신의 핵심은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쇄신과 2대 국정과제로 꼽혔던 세종시 및 4대강 사업의 방향 전환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 해법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본다.

◇인적쇄신=이 대통령은 이날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 인적 쇄신에 전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국면전환용 인적개편’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효율적 진용’을 갖추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편 규모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적 안배 실현 여부다.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 핵심 부처에

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부처 일부 장관에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청와대에서는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의 정치권 진출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심과의 창구가 사실상 단절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재풀을 총 가동, 광주·전남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 지역 민심과의 창구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계속적인 추진 의사를 보이면서도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수계 등 환경 문제와 함께 주변연계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영산강 수질 개선의 핵심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 역시, F1 대회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지역개발사업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연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 환경 파괴를 최

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매개로 정부를 압박,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수정 =이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여야 정치권이 표결을 실시, 세종시 수정의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및 한나라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사실상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그동안 우려돼왔던 ‘세종시 블랙홀’ 우려도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나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성장 엔진인 LED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민행동은 1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지지하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정세균 “MB, 민심 모르고 무책임”

### TV·라디오 연설 비판



그는 4대강 공사 연급과 관련,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에 독선이 가득 차 있다”면서 “하루빨리 치수사업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며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즉시 실천하는 것이 이 정권에도 좋고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국회 표결처리 요청에 대해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결사해지를 촉구했다.

으로 정상화하는 게 옳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46명의 장병과 천안함이 두 동강 난 데 대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시조차 없는 회견이었다”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박근혜 “국회로 넘어온 건데...”

### 세종시 수정안 입장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결정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TV·라디오 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 국회 표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회로 넘어온 건데...”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온 것인 만큼, 국회 논의 절차를 밟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언급으로 보인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데

이와 관련, 한 친박 인사는 “국회 절차에는 표결참여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수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아 18대 국회가 끝나 자동 폐기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수질개선은 ‘공감’ 토목사업엔 ‘팽팽’

### ■ 4대강 영산강 살리기 단체장 입장

### 하류지역 찬성·상류지역 반대 많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하류 지역에서는 찬성쪽인 반면, 상류에서는 반대 입장이 다소 우세하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입장도 엇갈린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복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것으로, 운하와 혼

동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박 지사는 “영산강 인근은 강 쪽이 50~100m에 달하지만 실제 흐르는 물은 많지 않아 전천에 가깝고 영산강 하류 지역은 물은 많은데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라며 영산강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영산강 중·하류지역인 나주·무안·영암군도 찬성 입장이다.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일태 영암군수도 “지역에서 살아 보면 알 수 있다”며 영산강 살리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친환경 농업에는 깨끗한 농업 용수가 절실한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는 다만, 하천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영산강 수질 개선 차원에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 제거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득 목포시장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목포항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산강 상류인 광주시와 인근 담양과 함평 등 지자체에서는 영산강 사업에 반대하거나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

았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보를 설치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준설을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생활 하수 등을 걸러 수질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도 “영산강에 필요한 것은 수질개선 사업이지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 당선자도 “상류인 담양은 현재 토목개발이 아닌 생태하천 복원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박준영 지사 규탄 천막농성

### 영산강 지키기 시민행동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민행동은 1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규탄한다”면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영산강 사업은 강바닥을 파내고 물 흐름을 가로막는 댐을 만들어 영산강을 인공 호수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강을 회복하고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 타당성이 없고 주민의 동의와 합의도 없는 일방적 국책사업으로 검증과 검토과정도 부실해 수질 개선은 커녕 홍수문제 등 물 문제를 야기할 위험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운찬 “나가면 편할 것이지만...”

### 사퇴 거부 입장 밝혀



면서 “지금 이 시간에 총리직을 홀출 던지고 나가면 마음은 편할 것이지만 현재는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정을 수습하도록 하겠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민주당 유선호·전병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과 자주 만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을 했고,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그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내각 총사퇴 필요성에 대해선 “감사원도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 엄정한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5분만에 투자 가능한 HeartPlus AC-1000...  
5분만에 투자 가능한...

광주비특허기술관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까지 지원...

